

일본의 국토 및
지역발전계획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2017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18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18

I. 지방 창생을 둘러싼 상황 인식

1. 일본의 인구 감소·고령화 현황 ... 338
2. 도쿄 일극집중(一極集中)에 대한 상황 인식 ... 339
3. 지역경제 현황 ... 341

II. 지방 창생 기본방침

1. 생애주기에 맞춘 지방 창생의 충실·강화 ... 342
2. '두근두근 지방생활 실현 정책 패키지'의 수립 실행 ... 344
 - (1)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UIJ턴 시책의 획기적 강화 ... 345
 - (2) 여성 고령자 등을 위한 신규 취업기회 발굴(6년간 24만 명) ... 346
 - (3) 지방에서의 외국 인재 활용 ... 346
 - (4) 국민의 관심을 끄는 효과적·전략적인 홍보 ... 347
3. 인생 100년 시대의 관점에서 본 지방 창생 ... 347
4. 2020년 이후의 차기 5개년 「총합전략」 ... 348

III. 분야별 시책의 추진

1. 두근두근 지방생활 실현 정책 패키지 ... 349
 - (1) UIJ턴에 의한 창업·취업 확대(6년간 6만 명) ... 349
 - (2) 여성·고령자 등을 위한 신규 취업기회 발굴(6년간 24만 명) ... 350
 - (3) 지방에서의 외국 인재 활용 ... 351
 - (4) '지역살리기협력대' 확충(6년 후 8천 명) ... 353
 - (5) 어린이 농산어촌 체험 충실화 ... 354
 - (6) 국민의 관심을 끄는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 355
2. 지방에 일자리 만들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 356
 - (1) 지역중핵기업의 발굴·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 미래 투자 촉진 ... 356
 - (2) 지역경제 풀뿌리사업 창출 환경 정비 ... 358
 - (3) 관광지역 만들기·브랜드화 등의 추진 ... 362
 - (4) 근미래기술(近未來技術)의 실증 및 실험 ... 364
3.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 이동 흐름 만들기 ... 365
 - (1) '반짝반짝 빛나는 지방대학 만들기' 등 지역 청년 학업 및 취업 촉진 ... 365

- (2) 지방으로의 기업 본사 기능 이전 촉진 ... 366
- (3) '생애활약마을' 추진 ... 367
- (4) 정부 관계기관의 지방 이전 ... 368
- 4. 청년 세대의 결혼·출산·육아 희망 실현하기 ... 369**
 - (1) '지역 일하는 방식 개혁회의'에서의 '일하는 방식 개혁' 실천 등 ... 369
 - (2) 신생아 수와 출산율 향상에 관한 우수 시책 사례 확산 ... 371
- 5. 시대에 적합한 지역 만들기, 안심 생활을 위한 지역과 지역의 연계 ... 371**
 - (1) 마을 만들기를 통한 지역 연계 추진 ... 371
 - (2) 에어리어 매니지먼트(Area Management) 등에 의한 마을 만들기 추진 ... 373
 - (3) '컴팩트+네트워크'의 본격적 추진 ... 375
 - (4) 유희자산 활용을 통한 지역의 '돈벌이 역량' 강화 ... 377
 - (5) 지방경제의 중추·중핵도시에 대한 투자 환기 ... 378
 - (6) 집락생활권 유지를 위한 '작은 거점' 및 지역운영조직 형성 ... 379
 - (7) 지역 공생 사회의 실현 ... 380
 - (8)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 추진 ... 382

IV. 지방 창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지방 창생판 세 개의 화살

- 1. 정보 지원 ... 384**
- 2. 인재 지원 ... 385**
 - (1) 지방 창생 칼리지(College) ... 385
 - (2) 지방 창생 컨시어지(Concierge) ... 385
 - (3) 지방 창생 인재 지원 제도 ... 385
- 3. 재정 지원 ... 386**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18



まち・ひと・しごと創生基本方針 2018

I

지방 창생을 둘러싼 상황 인식

1. 일본의 인구 감소·고령화 현황

일본의 인구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 국면으로 들어섰다. 2017년 10월 1일 인구추계¹에 의하면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670만 6천 명으로 전년에 비해 22만 7천 명이 감소했으며 7년 연속 감소 중이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3,515만 2천 명으로 총인구에 대한 고령자 비율(고령화율)이 27.7%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속도와 규모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이라 함)은 2005년에 1.26으로 최저를 기록한 후 증가 추세로 돌아서 2015년에는 1.45까지 상승했으나, 2016년에 1.44로 2년 만에 다시 낮아졌으며, 2017년에는 1.43이 되었다. 연간 신생아 수는 2016년에 97만 7천 명으로 1899년 통계 개시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2017년에는 94만 6천 명이 되었다.²

2017년에 발표된 국립사회보장·인구보건연구소의 ‘일본의 장래추계인구’(출생·사망 중위추계)³에서는 최근의 이러한 출산율 상승 경향을 반영해 장래 출산율을 5년 전 추계 시 적용했던 1.35보다 높은 1.44로 설정했다. 그 결과 2065년 총인구는 5년 전 추계 시보다 약 670만 명 증가한 8,808만 명으로 추계되었으며, 고령자(65세 이상)인구 비율은 2%포

¹ 총무성 「인구추계(평성29년 10월 1일 현재)」(2018년 4월 13일 공표).

² 후생노동성 「평성 29년(2017) 인구동태통계월보연계(개수)」(2018년 6월 1일 공표).

³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추계인구(평성29년 추계)」(2017년 4월 10일 공표).

인트 낮아진 38.4%로 추계되어 인구감소의 속도와 고령화의 진행 정도가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8년에 발표된 국립사회보장·인구보건연구소의 ‘일본의 지역별 장래추계인구’⁴에 따르면 2040년의 경우, 5년 전 추계 시와 비교해 볼 때, 인구가 감소한 지방자치단체 수가 전체의 약 70%이고, 어린이(15세 미만)인구 비율이 낮아지고 노인인구 비율이 상승한 지방자치단체수가 약 50%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 규모별로 분석하면, 인구 규모가 큰 시정촌 중에는 인구 피크의 시점이 5년 전 추계 시보다 뒤로 미루어진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나, 인구 규모가 작은 시정촌일수록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경향이 더 빨라지고 있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쿄도를 제외한 모든 도부현에서 2045년 인구가 2015년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전체적인 동향으로 볼 때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 만한 상황을 만들지 못한 채,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앞으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도쿄 일극집중(一極集中)에 대한 상황 인식

도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지속되면서, 이른바 도쿄 일극집중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오사카권(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및 나라현)과 나고야권(아이치현, 기후현 및 미에현)이 5년 연속 전출 초과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도쿄권(도쿄도, 사이타마현, 지바현 및 가나가와현)은 2017년에 12만 명의 전입 초과(22년 연속)를 기록했다. 전출자수는 36만 2천 명(전년대비 2천 명 증가)이었으나, 전입자수는 이를 상회하는 48만 1천 명(전년대비 3천 명 증가)에 달했다. 도쿄권의 초과전입자수는 2011년 이후 5년간 감소했으나, 2016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청년층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⁵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의 도쿄권 인구는 3,643만 9천 명으로 전국 인구의 약 30%가 도쿄권에 집중하고 있다.⁶ 도쿄권 초과전입자의 대부분은 청년층으로 2017년에는 15~19세(2만 7천 명)와 20~29세(9만 1천 명)를 합해서 약 11만 명이 도쿄권으로 이주했으며 지

⁴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지역별장래추계인구(2018년 추계)」(2018년 3월 30일 공표),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장생본부 사무국 집계(후쿠시마현은 포함되지 않음).

⁵ 총무성 「주민기본대장 인구이동 보고 평성29년(2017년) 결과」(2018년 1월 29일 및 4월 26일 공표).

⁶ 총무성 「인구추계(평성29년 10월 1일 현재)」(2018년 4월 13일 공표).

속적으로 증가 경향에 있다(2017년은 전년대비 2천 명이 증가).⁷

도쿄권 이외의 지방에서는 2000~2015년까지 15년간 15~29세 청년인구의 약 30%(532만 명),⁸ 신생아 수는 약 20%(17만 명) 감소했다. 도쿄권에서 청년인구 약 20%(175만 명), 신생아 수 약 5%(2만 명)가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크다. 그러한 가운데 도쿄도와 오키나와현에서는 지난 15년간 신생아수가 증가했는데, 특히 도쿄 23구에서 23.6%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⁹

도쿄권으로의 인구 전출 초과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도쿄권으로의 초과 전출자수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령 지정 도시와 현청소재시 등 중추·중핵도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출 초과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63개 지방자치단체의 약 50%, 상위 200개 지방자치단체의 약 70%, 상위 300개 지방자치단체의 약 80%가 이에 해당한다.¹⁰ 도부현별로 보면, 도쿄권으로의 초과 전출자수가 특히 많은 곳은 오사카부, 효고현, 아이치현과 같이 대도시권에 속해 있는 부·현들이며, 다음으로는 동일본의 각 현에서 초과 전출자수가 많다.

도쿄권의 경우, 도심부를 중심으로 육아 세대가 특히 집중해 있는 지역의 보육원 등 정비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175만 명이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¹¹되고 있다. 이에 따른 의료·복지 수요 증대로 인해 지방의 의료·복지 관련 인재를 중심으로 도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도쿄는 일본의 성장 엔진 역할과 함께 세계를 선도하는 국제도시로 발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집적은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효율성, 일상생활 측면에서는 편리성, 생활 및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사람과 정보 교류의 직접성 등과 같은 장점을 갖지만, 과도한 도쿄 일극집중은 이를 넘어 장시간의 통근 시간, 높은 주택가격, 원하는 보육서비스와 고령자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등 생활환경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사람과 자산이 집중되어 있는 도쿄에 수도직하지진 등 거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도쿄의 피해가 커질 뿐 아

⁷ 총무성 「주민기본대장 인구이동 보고 평성29년(2017년) 결과」(2018년 1월 29일 및 4월 26일 공표).

⁸ 총무성 「인구추계」에서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사무국 집계.

⁹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에서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 사무국 집계.

¹⁰ 2017년 주민기본대장의 인구이동 데이터에 근거해,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 사무국 집계.

¹¹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지역별 장래 추계인구(평성30(2018)년 추계)」(2018년 3월 30일 공표).

나라 일본 경제 전체에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도쿄 일극집중 현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긴급한 문제이다.

3. 지역경제 현황

지역의 경제동향을 보면 제2차 아베 내각의 발족 전과 비교할 때, 완전실업률은 모든 도도부현에서 개선됐고, 유효구인배율은 사상 처음으로 모든 도도부현에서 1배를 넘었으며, 시간당 임금도 모든 도도부현에서 상승하는 등 채용·소득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라고 하는 구조적인 변화 등으로 인해 지방에 따라서는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곳도 보이고 있다. 소비와 생산 등 경제활동의 동향은 지역 간에 편차가 있으며, 도쿄권과 그 외 지역 간에는 1인당 현민 소득 등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면서 노동공급의 정체가 지역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지방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비해 일손 부족을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중소기업 등 지방기업 경영자 중 2015년에 70세 이상이 되는 경영자의 약 절반이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후계자가 미정인 중소기업 등은 일본 기업 전체의 약 30%에 해당하며, 그중 약 절반 정도는 흑자 기업이다.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돈 버는 기업’이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II

지방 창생 기본 방침

1. 생애주기에 맞춘 지방 창생의 충실·강화

지방 창생은 저출산·고령화에 제동을 걸어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의 축소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2014년 12월 27일 각의 결정, 2017년 12월 22일 개정. 이하 「종합전략」이라 함), 「도도부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및 「시정촌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이하 「지방관 종합전략」이라 함)에서 설정한 기본목표와 핵심성과지표(KPI)의 달성을 위해 정책 패키지와 개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 창생은 2014~2015년도에 ‘전략 수립’(국가 및 지방) 단계를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전개’ 단계에 들어섰으며, 2017년에는 5개년의 「종합전략」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2018년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전국과 세계 곳곳에서 학생들이 모여들게 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지방대학 만들기’와 기업의 본사 기능 이전 촉진 등 생애주기에 맞춘 정책 메뉴의 충실화와 강화를 도모한다.

UITT 시책 등을 포함해 ‘사람’과 ‘일’에 초점을 맞춘 ‘두근두근 지방 생활 실현 정책 패키지’를 수립함으로써 지방 창생을 적극적으로 실행한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소규모 시정촌에서 충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연계해 추진한다. 앞으로는 ‘마을’에도 초점을 맞추어 도쿄권으로 인구 유출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정령지정도시를 비롯한 중추·중핵도시임을 감안해 중추·중핵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유치 및 지역기업의 사업 확대를 통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람과 대학이 집적한 매력적인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연내에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지방 창생은 지속성 있는 시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하루아침에 큰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일각이라도 지체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는 관계자들 사이에서 지방 창생에 대한 열의가 약해진 것은 아닌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위기의식에 편차가 느껴진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모두 위기감을 가지고 민·관이 함께 지방 창생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는 ‘자조(自助)의 정신’을 가지고 스스로의 아이디어로,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의 활용 등을 통해 데이터를 토대로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 및 파악하고, 시책의 효과를 검증하면서 지방 창생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로서는 앞으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가 지방 창생 시책 추진의 사령탑이 되어 관계부처와 연계하면서 의욕과 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 지원, 인재 지원, 재정 지원이라는 ‘지방 창생관 세 개의 화살’¹²로 강력하게 지원하도록 한다.

‘국가전략특구’에 대해서는 폭넓은 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암반규제’의 개혁을 실시한다. 지역 한정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¹³를 창설해 자동차의 자율주행, 무인항공기 및 이와 관련된 전파이용 등과 같은 고도의 혁신적인 ‘근미래기술(近未來技術)’에 대해 과거에 유례없는 실증·실험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현 가능하도록 한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으로부터 경제효과가 높은 규제개혁의 제안이 있을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담한 규제개혁을 제안한 열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4차 국가전략특구 지정을 검토한다. ‘총합특구’ 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특구가 기존 계획을 개정해 새로운 계획으로 이행한 점을 고려해 특구로부터의 규제 특례 조치 제안을 활성화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적절한 대응과 동시에 재정·세제·금융상의 지원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방 창생을 추진한다.

앞으로 지방 창생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추진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30년을 기한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¹² ‘화살 한 개는 쉽게 부러지지만 세 개를 한번에 부러뜨리는 것은 어렵다.’라는 의미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012년 12월 취임 당시 이 일화를 언급하면서 핵심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Abenomics)의 3가지 요소인 대담한 금융 정책을 통한 양적 완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공격적인 성장 전략 추진을 한꺼번에 추진하겠다고 밝혀 세 개의 화살이라고 부름(편집자 주).

¹³ ‘국가전략특구’를 대상으로 외국의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참고해 감시·평가 등의 사후체크를 엄비함으로써 현행 법·규제 관련 사전규제·절차를 재검토하는 것.

(SDGs)¹⁴의 달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SDGs를 주류화(Mainstreaming)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 향상 요소를 최대한 반영한다.

2. '두근두근 지방생활 실현 정책 패키지'의 수립·실행

지방에서는 통근시간이 짧아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주변에 자연 환경이 가까우며, 신선한 지역 농산물로 풍부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생활비와 주택 취득의 비용이 적어 수입이 낮아도 넓은 주택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여유로움'을 향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의 역사·문화·전통 등의 매력이 넘쳐난다. 따라서 '좋은 환경에서 일 혹은 연구에 전념하고 싶다', '지역의 전통 문화·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싶다', '지역 특성을 살린 창업에 도전하고 싶다', '경쟁 상대가 적은 지방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고 싶다', '자연이 풍부한 지방에서 아이의 사회능력과 사고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육아를 하고 싶다', '부모를 병구완하면서 일을 계속 하고 싶다', '회사 은퇴 후에도 취업을 통해서 사회와 접점을 가지고 싶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지방으로 이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도시부에서 과소지역 등의 농산어촌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전원회귀의 조류가 나타나고 있으며 '관계인구'¹⁵라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방에서 도쿄권으로 매년 10만 명 이상의 전출 초과가 계속 되어 200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지방의 청년인구는 약 30%가 감소(532만 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취업자의 경우, 도쿄권에서는 증가(160만 명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228만 명 감소)하고 있다.¹⁶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15~64세) 취업자의 경우 도쿄권에서는 경미한 감소(25만 명 감소)에 머무르고 있으나 지방권에서는

¹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약어로, 2015년 9월 국제연합 서밋에서 채택된 2030년을 기한으로 하는 선진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17개 개발 목표를 말함. 모든 관계자(선진국, 개발도상국, 민간기업, NGO, 전문가 등)의 역할을 중시해 '누구 하나 소외됨이 없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경제·사회·환경을 둘러싼 광범위한 문제에 통합적으로 대처함.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 실시 지침'(2016년 12월 22일, 제2회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 추진본부 결정)에서 정부 전체 및 관계 부처의 각종 계획과 전략, 방침을 수립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SDGs를 주류화(Mainstreaming)하도록 하고 있음.

¹⁵ 마음에 드는 지역에서 주말 동안 생활하거나, 빈번하게 왕래하지는 않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그 지역을 응원하는 사람들, 즉 '관광 이상 이주 미만'으로 일컬어지는 움직임.

¹⁶ 총무성 「노동력조사 기본집계」 데이터에 근거해 내각 관방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사무국에서 작성.

도쿄권으로의 전출 초과 영향으로 크게 감소(310만 명 감소)하고 있다. 여성(15~64세) 취업자의 경우, 도쿄권에서는 증가(91만 명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크게 감소(72만 명 감소)하고 있다. 취업률을 보더라도 지방의 증가율이 도쿄권의 증가율을 밀돌고 있다(도쿄권은 10.5포인트 증가, 지방은 6.9포인트 증가). 고령(65세 이상) 취업 인구는 도쿄권과 지방 모두에서 증가(도쿄권 94만 명, 지방 154만 명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에서의 취업률은 감소(1%p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일손 부족이 심해지고 있어 향후 성장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담당 대신’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두근두근 지방 생활 실현회의’가 설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지방에서 개인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게 한다는 질적인 측면은 물론 지방의 인력 확보라는 양적인 측면의 두 가지 관점에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방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여성과 고령자 등의 활약, 외국 인재의 활용 등을 추진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대담한 시책들이 논의되었으며 6월 5일에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이 내용을 근거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가 사령탑이 되어 관계부처와 연계해 다음의 (1)~(4)로 구성된 ‘두근두근 지방생활 실현 정책 패키지’를 작성했으며, 이를 통해 지방 창생을 대담하게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1)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UIJ턴 시책의 획기적 강화

① UIJ턴에 의한 창업·취업 확대(6년간 6만 명)

도쿄권(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서 도쿄권 외 지역으로의 UIJ턴에 의한 창업·취업(사업 승계를 포함)을 촉진하고, 일손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등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국 규모의 인재 매칭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방창생추진교부금과 채용 관련 보조금을 활용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책을 통해 ‘지방에서 창업하고 싶다’, ‘자연이 풍부한 지방에서 육아를 하고 싶다’, ‘부모님의 병 구완을 하면서 일을 계속 하고 싶다’ 등과 같은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장래에는 UIJ턴으로 연결될 수 있는 ‘관계인구’의 확대 시책을 추진한다.

② ‘지역살리기협력대’의 확충(6년 후 8천 명)

‘지역살리기협력대’ 응모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대원 수를 확충해 나간다. 지금까지의 창업 지원에 추가해 사업승계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임기 종료 후의 지역 정주 및 정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추가적 확충 방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③ 어린이 농산어촌 체험의 충실화

어린이 농산어촌 체험은 살아가는 힘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장래 UJ턴의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초·중·고등학교별로 관련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선구적인 장기(4박 5일 등) 시책 등에 대해서는 지원 확충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관계부처가 연계해 실시한다.

(2) 여성·고령자 등을 위한 신규 취업 기회 발굴(6년간 24만 명)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이나 고령자 등의 창업·취업(사업승계 포함) 촉진 및 일손 부족에 직면한 지역 중소기업 등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국 규모의 인재 매칭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이나 채용 관련 보조금을 활용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생산성 혁명에 기여하는 지방창생거점정비교부금'을 활용한 리커런트 교육(Recurrent Education)¹⁷용 연수시설 등의 정비·개수를 지원한다. 이러한 시책을 통해 '육아가 일단락되어 이제는 취업하고 싶다', '회사 은퇴 후에도 취업해 사회와 접점을 가지고 싶다'와 같은 생각을 가진 여성·고령자 등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의 시책들은 차기 「총합전략」의 계획기간 5년을 포함하는 '6개년 집중 플랜'을 통해 실행한다.

(3) 지방에서의 외국 인재 활용

지방 창생 시책에 의한 방일 관광객의 증가와 지역특산품 수출 확대,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 공생의 충실화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 인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본에 호감을 가진 해외 거주 외국 인재를 발굴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 인재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 창생에 종사하는 외국 인재에게는 재류자격에 대해 '포괄적인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새롭게 부여한다. 일본 내 대학 등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전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고도인재 포인트제'의 확충과 재류 자격 변경 절차 간소화 등을 실시한다.

¹⁷ 경제 협력 개발 기구가 제창한 생애 교육의 하나.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순환을 위해 사회로 나온 사람의 학교 재입학을 보장하는 것임.

(4) 국민의 관심을 끄는 효과적·전략적인 홍보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이동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지방 생활의 매력을 구체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방에서의 여유로운 생활과 꿈의 실현 등에 대한 국민적인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효과적·전략적인 매체, 수법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총합전략」 시행 4년째를 맞이해 지역의 창의에 의한 다양한 지방 창생 우수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폐교 직전이었던 섬 내 유일한 고등학교를 지역 자원과 지역 인재를 활용해 전국에서 학생이 모여드는 인기 학교로 변모시킨 시마네현 오키제도(隱岐諸島)의 아마초(海士町) 사례, 중산간지역으로서 국가전략특구제도를 활용해 농업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효고현 야부시(養父市) 사례, 어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에 도전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6차 산업화를 실현한 아마구치현 하기시(萩市) 사례, ICT 환경을 정비해 원격 근무를 하는 사람 및 기업들을 유치한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초(神山町) 사례 등이 있다. 이러한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성공사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사업 추진 프로세스를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공개하고, 각각의 지역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를 개선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전국적 전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인생 100년 시대의 관점에서 본 지방 창생

인생 100년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사람들은 ‘20년 배움, 40년 근로, 20년 휴식’이라고 하는 라이프 사이클과 함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인터넷의 보급과 교통 인프라의 발달에 따라 지방이나 도쿄, 해외를 포함해 어디든지 각자의 생활 양식에 맞추어 살아가는 장소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상황은 기회이다. 저렴한 생활비와 낮은 주택 취득 비용, 좋은 자연 환경과 고유의 문화 등 지방의 강점을 살려서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장소,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한 장소를 원하는 다양한 인재를 모아 지역의 활성화로 연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생 100년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 창생에서 ‘배움’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다. 지방을 떠나 도쿄에서 공부하고 한 단계 성장한 후에 지방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도쿄에서 지방으로 공부하러 왔다가 지방의 매력에 끌려 그대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함께 사회인 재교육은 새로운 직업에의 도전과 지역에의 공헌 등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인생 100년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의 생활 양식이 다양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 또한 마을마다 그 마을에 맞는 미래상을 갖게 된다. 지역에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지역을 활기차게 함으로써 일본이 활기차게 되고 국토의 유지·발전으로 이어진다. 지역은 '자산지소(地產地消)'와 분산형 에너지, '근미래기술(近未來技術)'의 실증·실험 등을 통해 지역의 '돈벌이 역량'을 키우고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관점을 가지고 차기 5개년의 지방 창생「총합전략」을 검토하도록 한다.

4. 2020년 이후의 차기 5개년 「총합전략」

지방 창생은 2060년이라고 하는 먼 미래를 염두에 둔다. 다음 세대 그리고 그다음 세대와의 위기감을 공유하여 인구감소에 제동을 걸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창생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현재의 「총합전략」에 이어 차기 5개년에 대한 「총합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19년까지인 현행 「총합전략」의 마무리와 함께 그 진척 상황을 총 점검하고, 국가 시책, 지원 조치(정보 지원, 인재 지원, 재정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각종 시책의 효과 및 결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2020년도 이후의 차기 「총합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신생아 수 및 출산율 향상 시책의 사례 조사, 도쿄 일극집중의 시정과 관련해 특히 청년층의 도쿄권 전입 요인에 대한 분석, 지역소득 향상을 위한 시책 분석,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관 총합전략」에 근거해 추진한 시책의 진척 상황 조사·분석 등을 실시해 차기 「총합전략」에 반영하도록 한다. 2019년에 전국 규모의 포럼을 개최하는 등 현행 「총합전략」의 총정리 및 차기 5개년 「총합전략」 수립을 위해 지방 창생을 국민 운동으로 승화해 나간다.

Ⅲ

분야별 시책의 추진

1. 두근두근 지방생활 실현 정책 패키지

(1) UJ턴에 의한 창업·취업 확대(6년간 6만 명)

● 개요

‘지방에서 창업하고 싶다’, ‘자연이 풍부한 지방에서 육아를 하고 싶다’, ‘부모님의 병구완을 하면서 일을 계속하고 싶다’와 같이 다양한 생활 양식을 찾아서 UJ턴을 한다든가 도시 부에서 과소지역 등의 농산어촌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전원 회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희망 실현과 지방의 인재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UJ턴에 의한 창업과 지방 중소기업 취업(사업 승계를 포함)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국 규모의 인재 매칭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방창생추진교부금과 채용 관련 보조금을 활용해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며, 특히 창업은 관계부처의 시책 및 각종 금융기관의 자금 융통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향후에 UJ턴으로 연결될 수 있는 ‘관계인구’의 확대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이주자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검토한다.

● 구체적 추진 방안

이주 지원책의 획기적 확충

- 도쿄권(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서 도쿄권 이외의 지역으로 UJ턴을 한 자가 창업 또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이주에 따른 경제 부담과 중소기업 등의 채용 활동에 대한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창생추진교부금과 관련 보조금을 활용한 지원을 검토한다. 이 경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진적인 이주 관련 시책에

대해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추진하도록 한다. 특히 창업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기관과 자금 융통을 연계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등과 연계해 UJT턴 인구의 주거 확보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 창업에 무관심한 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지원하여 UJT턴에 의한 창업 희망자를 확대해 나간다. 창업 노하우 등을 제공해 원활한 창업을 유도함으로써 위에서 제시한 이주 지원책을 보완한다.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의 홍보 및 원활한 인재매칭 지원

- UJT턴 희망자와 지방 중소기업 등을 연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통일성과 일관성 있는 정보 제공 및 이를 통한 전국 규모의 인재 매칭을 지원한다. 각종 금융기관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인정보에는 대기업의 정보와 함께 지방의 중소기업 정보(‘지역살리기협력대’ 정보도 포함)도 폭넓게 게재한다. 이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헬로 워크(공공 직업소개소)와도 연계한다.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시책

- 향후에 UJT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또는 지역주민들과 다양하게 연관돼 있는 ‘관계인구’를 창출하기 위한 시책을 지방창생추진교부금 등을 활용해 적극 추진한다.

산(産)·관(官)·금(金)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지역기업 경영인재 환류 촉진

- 지역중핵기업의 경영인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페셔널 인재 전략거점’ 사업은 대기업 및 지역금융기관 등과의 연계를 촉진한다. 광범위한 중소기업의 경영인재 수요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금융기관이 관여해 대기업 OB·OG 매칭을 실시하고 있는 ‘신 현역교류회’ 시도와 관련해 OB·OG 리스트를 확충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2) 여성·고령자 등을 위한 신규 취업기회 발굴(6년간 24만 명)

● 개요

‘육아가 일단락되어 취업이 하고 싶다’, ‘회사 은퇴 후에도 취업을 통해 사회와의 접점을 가지고 싶다’와 같은 여성·고령자 등의 희망 실현과 지방 인재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지방에서의 여성·고령자 창업과 중소기업 취업(사업승계 포함)을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전국 규모의 인재 매칭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방창생추진교부금과 채용 관련 보조금을 활용해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며, 특히 창업은 관계부처의 시책 및 각종 금융기관의 자금 융통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한다.

● **구체적 추진 방안**

신규 취업 지원책의 획기적 확충

- 현재 직업이 없는 여성·고령자 등이 창업을 하거나 중소기업 등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에 지방창생추진교부금 및 채용 관련 보조금을 활용한 지원을 검토한다. 이 경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진적인 이주 관련 시책에 대해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 직업이 없는 여성·고령자 등의 취업 의욕을 환기하는 시책을 지원하며, 창업은 각종금융기관의 자금 융통과 연계해 추진한다.
- 여성·고령자 등과 지방중소기업 등을 연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일성과 일관성 있는 정보 제공 및 이를 통한 전국 규모의 인재 매칭을 지원하는 시책을 활용한다.
- 창업에 무관심한 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지원하여 지방의 여성·고령자 중에서 창업 희망자를 확대해 나간다. 또한 창업노하우 등을 제공해 원활한 창업을 유도함으로써 위에서 제시한 신규 취업 지원책을 보완한다.

여성·고령자 등의 활약을 촉진하기 위한 리커런트(Recurrent) 교육의 획기적 충실화

- 사회적 재교육을 통해 여성·고령자 등의 취업, 창업, 지역 활동 참여 등을 촉진한다는 관점과 지역의 중견·중소기업 인재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리커런트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충실화해 ICT를 활용한 원격수업,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전문학교 등의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 여성·고령자 등의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공적 직업훈련과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 ‘생산성 혁명에 기여하는 지방창생거점정비교부금’을 활용해 리커런트 연수시설 정비·개수를 지원한다.

(3) 지방에서의 외국 인재 활용

● **개요**

지방 창생 시책에 따른 외국 관광객 증가와 지역 생산품의 수출 확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 공생의 충실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외국 인재 활용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시책과 함께 아시아와 중남미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일본에 호감을 가진 외국 인재를 발굴하며, 외국 인재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서로 매칭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외국 인재가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수의 재류자격에 걸쳐 활동 가능한 ‘포괄적인 자

격 외 활동 허가'를 새롭게 부여한다. 이와 함께 일본 내 대학 등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그들이 가진 전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고도인재 포인트제'의 확충과 재류자격 변경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외국 인재가 지역에서 더 많은 활약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의 다문화 공생 시책을 더욱 강화한다.

● 구체적 추진 방안

'외국 인재에 의한 지방 창생' 지원 제도 창설

- 외국 인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국제교류기금 및 국제협력기구(JICA)와 연계해 일본어 학습자, 일본계 외국인, 국비로 일본에 유학했던 외국인 등 일본에 호감을 가진 해외의 외국 인재를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약하고 싶어하는 외국 인재를 대상으로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외국 인재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지방 창생 업무)를 원활하게 매칭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다.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외국 인재가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다문화 공생, 재해 대응과 교육 등에서 폭넓게 활동 가능한 '포괄적인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새롭게 부여한다.

외국인 유학 수료자를 전문 인재로 적극 활용

- 우수한 인재에 대해 출입국관리상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고도인재 포인트제'의 특별가산 대상 대학을 확대한다.
- 외국인 유학 수료자의 취업 시 재류자격 변경 신청 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동일한 제출 자료만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한다.
- 외국인 유학 수료자의 취업 시 재류자격 변경 허가에 있어서 재류자격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인 경우에는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의 전공 분야와 업무의 관련성을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에서 그 취지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입학 자격 완화

- 다양한 국가·지역에서 유학생을 받아들여 대학의 국제화가 더욱 진전될 수 있도록 11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에 상당하는 학교에 입학이 인정되는 국가인 경

우에는 국내 대학의 입학 자격을 인정할지의 여부를 검토해, 신속하게 결론을 얻도록 한다.

외국 인재가 지역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

- JET프로그램¹⁸의 국제교류원(CIR)에 대해 지역의 경제 단체 등과 연계한 업무 실시를 촉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해외 판로 개척 등에 종사하는 국제교류원을 확대한다.
- 외국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JET프로그램 수료자와 유학생 등이 지역산업 종사자 또는 지역살리기협력대원 등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매칭 기회를 확대한다.
- 또한 성공사례의 공유·확산과 다문화 공생 시책 담당자 육성을 추진하는 등 지역에서의 다문화 공생 시책을 강화한다.

(4) '지역살리기협력대' 확충(6년 후 8천 명)

● 개요

2017년의 '지역살리기협력대' 대원수는 4,976명(이 중, 구(旧) '농촌근로대' 대원은 146명)으로 2013년과 비교하면 약 5.1배로 증가했다. 대원의 약 60%는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동일 시정촌 내에 정주한 대원의 약 30%가 창업하는 등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응모자의 저변을 확대해 대원수를 확충하고 창업에 추가하여 사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임기 종료 후의 정주·정착을 확대한다. 제도 창설로부터 10년째를 맞이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역살리기협력대' 확충 방안을 연내에 도출한다.

● 구체적 추진 방안

'지역살리기협력대' 확충

-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채널 구축을 통해 시니어층과 일본 거주 외국인, 청년 해외협력대 경험자, '고향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등 응모자의 저변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 또는 지역주민들과 다양하게 관련돼 있는 소위 '관계인구'를 창출함으로써 향후에 대원이 될 수 있는 후보자를 확보해 나간다.

¹⁸ 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 대원이 창업할 경우 금융 지원을 검토하는 등 창업 지원에 충실하는 동시에 ‘사업인계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자와 대원을 매칭하는 모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 승계를 지원해 임기 종료 후의 정주·정착을 유도한다.
- ‘지역살리기협력대’로 활동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지역협력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활동 지역과의 매칭을 도모하는 ‘체험형 지역살리기협력대(가칭)’를 창설한다.
- 앞으로 증가하게 될 OB·OG 대원을 네트워크화해 대원 유치·지원 체제를 내실화한다.
- 제도 창설 후 10년째를 맞이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문제 청취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역살리기협력대’의 확충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도록 한다.

(5) 어린이 농산어촌 체험 충실화

● 개요

농산어촌 체험은 어린이가 지방의 자연, 역사, 문화 등에 매력을 느끼고 깊이 이해하여 생명과 자연을 존중하는 정신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사람과 사람 간 교류의 중요성, 농림어업의 의의를 알게 됨으로써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다. 이와 같은 체험을 통해 지방을 잘 모르는 도시부의 어린이가 어른이 된 후 지방으로 U/I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초·중·고의 각 단계에서 일정 기간 농산어촌에 체재하면서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방의 어린이들도 도시부 어린이와의 교류를 통해 자기 고장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으므로 체험활동의 추진은 도시와 농산어촌 간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체험 지역의 지방 창생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의 농산어촌 교류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관계부처가 연계해 실시하도록 한다.

● 구체적 추진 방안

어린이의 농산어촌 체험에 대한 목표 설정

- 금년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 체험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설정한다.

어린이의 농산어촌 체험에 대한 지원 확충

- 선구적인 장기 체험활동(4박 5일 등)과 중학교 체험활동 등에 대한 지원 확충을 검토한다.

체험활동에 대한 지원 체제 구축

- 신규로 어린이 농산어촌 체험을 실시하려는 학교 등에 필요한 체험 지역의 정보를 담은 코디네이터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직원의 부담 경감이라는 관점에서 지원 가능한 교직원 OB·OG, 대학 및 지역 자원봉사자 등의 데이터도 함께 구축하며, 교육위원회, 대학 등의 관계기관에 지원 인재에 관한 데이터 수집에 대해 협력을 의뢰한다. 또한 교육위원회 등에는 새로운 코디네이터 시스템의 활용에 대해 협력을 의뢰하도록 한다.

홍보 및 학교 등에 대한 지원·대응

- 어린이의 보호자를 비롯한 관계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는 농산어촌 체험의 교육 효과에 대한 홍보를 전개한다.
- 학교 등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 어린이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또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농산어촌 체험을 실시할 때 해결해야 할 문제 및 해결사례 그리고 수업시간 수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사례집을 작성해 소개한다. 더불어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참여도 추진한다.

체험 지역에 대한 지원·대응

- 농림수산성의 ‘농박(農泊) 추진 시책’을 통해 정비한 시설을 어린이 농산어촌 숙박 체험에도 유효하게 활용한다.
- 환경성의 ‘자연공원 등 사업’ 등을 활용해 어린이의 자연 체험에 필요한 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 국립공원을 포함해 농산어촌 체험 실시지역에서 연수회, 세미나 등을 통한 노하우의 취득·개발 등 인재 육성과 체험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강화를 추진한다.

(6) 국민의 관심을 끄는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 개요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이동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 이주에 대한 지원 시책뿐 아니라 생애주기에 대응한 지방 생활의 매력을 구체적으로 알림으로써 지방에서의 풍요로운 삶과 꿈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므로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시행해야 한다.

「총합전략」 4년째를 맞이해 지역의 창의적 발상에 의한 다양한 지방 창생 우수사례가 생기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례를 소개해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수사례

가 탄생하기까지의 프로세스를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각 지역들이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이를 개선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구체적 추진 방안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효과적·전략적 홍보

-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이동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 거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입학, 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이동이 활발해지는 4월에 청년층을 타깃으로 미디어와 SNS 등을 활용해 지방 생활의 매력을 홍보하는 정부 캠페인을 벌였다. 이와 함께 진학이나 취업으로 도쿄로 이주한 사람들이 새로운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5월에는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47개 도도부현이 보내는 응원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지방’, ‘고향’에 대한 인상을 심어주고자 했다. “그래, 지방에서 살자!” 국민 회의에서는 지방 이주 경험자와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 거주 추진을 위한 의견들을 교환하고 실제 이주자가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공 사례를 홍보했다.
- 지방에서의 풍요로운 삶과 꿈의 실현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지방에서 생활하는 것과 지방과 인연을 맺는 것에 대한 매력을 알게 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의 시책들이 일과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략성을 가지고 계속 시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통해 지방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찍은 동영상을 공유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매력을 홍보하는 등 타깃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해 홍보를 추진한다. 다양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지방 이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 생활 및 매력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 지역의 창의적 발상에 의한 다양한 지방 창생 성공 사례를 홍보하고, 전국적 확산을 촉진한다.

2. 지방에 일자리 만들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1) 지역중핵기업의 발굴·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 미래 투자 촉진

● 개요

지역경제의 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해외를 포함한 역외수요를 획득해 그 효과를 지역경제 전체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17년에 시행된 「지역경제견인사업의 촉진에 의한 지역 성장발전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40호, 이하 「지역미래투자촉진법」이라 함)에 근거한 ‘지역경제견인사업’에 예산·세제 등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견인사업’의 담당 주체인 지역중핵기업의 발굴·지원을 위해 지역 내 지원기관 간 연계를 한층 강화한다. 또한 지역에 꼭 필요한 경영 자원의 역내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외를 포함한 역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관련 시책과 연계하면서 지역 전체의 ‘돈벌이 역량’을 키워 나간다.

● 구체적 추진 방안

지역의 미래로 이어지는 ‘지역경제견인사업’의 촉진

- 2017년에 시행된 「지역미래투자촉진법」에 근거해 186개의 「기본계획」(2018년 5월 28일 기준), 634개의 ‘지역경제견인사업계획’과 32개의 ‘연계지원계획’이 승인되었다(2018년 5월 25일 시점). 이상의 계획에 대해서 예산(지방창생추진교부금 포함), 세제, 금융, 규제 특례 등의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3년간 약 2,000개의 기업 지원을 목표로 한다.
- ‘지역경제견인사업’ 후보를 다수 발굴한다는 취지 아래,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등에 근거해 2017년 12월 말에 2,148개사의 ‘지역미래견인기업’을 선정·공표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지역미래 컨시어지(Concierge)’에서 상세한 상담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미래투자촉진법」을 비롯해 해외 진출 지원, 전문 인재 확보 등에 관한 관련 시책들과 연계하여 지원해 나간다.
- 앞으로 추진 상황에 대한 PDCA¹⁹를 토대로 ‘지역경제견인사업’ 후보를 더 많이 발굴하는 동시에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지원기관과 연계해 ‘지역경제견인사업’과 ‘지역미래견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고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진흥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그 전략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해 「지역미래투자촉진법」을 비롯한 관계 시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지역경제견인사업’의 담당 주체로서 지역중핵기업의 발굴·지원

- ‘지역경제견인사업’의 담당 주체인 지역중핵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잠재 성장력이 높은 지역 내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파트너 후보기업 및 대학 등과의 연계 체제 구축을

¹⁹ Plan, Do, Check, Action의 약자로 목표에 의한 관리의 실천 절차.

지원하고, 사업화 전략의 입안, 기술 개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 국제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사업화에 정통한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 협의회’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까지 시야에 둔 사업화 전략의 입안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관계기관 등과 연계해 항공기, 신소재, 의료기기 등 성장 분야별 공통문제에 대응하고, 프로젝트 간 연계를 촉진한다.
- 이상의 시책을 통해 지역중핵기업 후보 등의 선도적 프로젝트를 매년 200개 정도씩 2020년까지 총 1,000개를 지원한다(경제산업성 예산 등으로 2017년 말 현재까지 약 400개 프로젝트 지원).
- 지역의 공공시험연구소, 대학, 산업지원기관, 금융기관 등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설비 도입 촉진과 광역에 걸친 지원 설비의 효율적인 활용, 지원 노하우의 상호 공유 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지원 기능을 강화해 간다.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새로운 경영 자원을 유입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청 및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연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유치 계획 수립과 지역 매력 홍보, 개별 기업 대상 접근 및 외국 기업 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JETRO 국내사무소의 지원 체제를 강화한다(2017년 말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액: 28.6조 엔).

(2) 지역경제 풀뿌리사업 창출 환경 정비

● 개요

지역경제의 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나가되, 지역을 지탱하는 지역기업의 돈 버는 역량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한 환경 정비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내에서 사업승계와 창업에 대한 지원 등 지역기업의 신진대사를 높이는 시책을 실시한다.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농림수산업, 관광업 등의 브랜드화를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상사(商社)사업’을 지원한다.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사회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검토한다.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에 대한 경영 인재의 환류를 촉진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뿐 아니라 지역의 실정에 정통한 지역금융기관을 참여시킴으로써 산·관·금 연

계를 강화해 나간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의 지역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한다.

● 구체적 추진 방안

사업승계

-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영자의 고령화로 2025년에는 70세를 넘는 중소기업 경영자 및 소규모 사업자가 약 2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약 절반이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일본 기업 전체의 약 30%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향후 10년 정도를 집중 실시 기간으로 설정하고 시책을 강화한다. 획기적으로 확충된 사업승계세제(증여세·상속세의 납세 유예)에 더해, M&A 지원 강화 등 승계 전후로 단절이 없도록 지원한다.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소규모·개인 사업주의 승계에 대해 예산·세금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대기업·중견기업과 연계한 승계 지원을 추진한다. 사업승계 수요의 발굴을 위해 각 도도부현에 구축된 ‘사업승계 네트워크’를 베이스로 하여 지역에 밀착된, 보다 상세한 지역 단위로 전문가 과견 등을 지원하는 ‘Push형 사업승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의 발전·생활 및 경제 기반으로서 필요한 비즈니스를 UIJT인재 등이 인계해 성장시키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인계지원센터’와 ‘프로페셔널 인재 전략 거점’을 연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창업 지원

- 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새로운 비즈니스 및 고용 창출을 위한 리스크성 자금의 확충과 함께 민관이 일체가 된 창업 지원과 창업자 교육을 보급해 신진대사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18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근거해 시·구·정·촌이 작성하는 ‘창업 지원 등 사업계획’을 국가가 인정함으로써 지역에서의 창업 지원 체제를 정비하고, 창업에 관한 보급·계발사업의 지원을 강화하며, 융자나 세제 우대 등의 자금 지원책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청이 개최하는 ‘창업스쿨 선수권’,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 등이 개최하는 ‘고등학생 비즈니스 플랜 그랑프리’ 등 창업 관련 이벤트를 통해 창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창업자 교육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우수사례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업과 관광업 등의 성장산업화를 위한 지역의 브랜드화

- 지역의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 자원의 고부가가치화와 시장 개척을 위한 ‘지역상사(商社)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지방창생추진교부금 등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외에 ‘지역상사협의회’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매칭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제공한다.

어업·수산업에 대한 여성 참여 촉진

- 어업·수산업에서 활약하는 여성의 자존감을 높이고 여성의 직업 선택 대상으로서 어업·수산업의 매력 향상을 지원하는 ‘어업 여자 프로젝트(가칭)’를 시작한다.

민간의 입장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사업’을 둘러싼 환경 정비

- 인구 감소와 재정 제약하에서 다양해지는 지역의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적 주체가 담당하고 있던 서비스의 일부를 사회적 사업에 개방하는 등 민간의 지혜와 노하우, 자본을 활용하는 사회적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① 사업을 담당할 핵심적 인재의 발굴·육성과 주위의 서포트 환경 정비, ② 사회성에 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시책 정비, ③ 사업 특성을 감안한 자금 조달 등 지원과 중소기업 시책과의 연계, ④ Social Impact Bond(SIB)의 보급 촉진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시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 ‘지방 창생 칼리지’ 등을 통한 사회적 사업의 창업·매니지먼트 인재 육성 지원 및 성공 사례 공유
- 사업의 사회성을 공정·공평·객관적으로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적 장치의 검토
- 상대적으로 자립까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사업의 특징을 감안해 자금 측면에서의 지원책 검토와 중소기업시책과의 연계
- 지방창생추진교부금 등에 의한 지원 및 공적 데이터의 이·활용 환경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SIB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효율화 추진
- 사회적 사업의 시장 규모 및 서비스 분야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조사 연구 추진

산·관·금 연계에 의한 지역기업의 새로운 경영 인재 환류 촉진

- 각 도부현에 정비되어 있는 ‘프로페셔널 인재 전략거점’을 통해 2017년 말 현재까지 약 2만 3천 건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약 2천 8백 건의 프로페셔널 인재 채용이 실현되었다.

앞으로는 사업승계를 포함한 경영 문제 및 서비스업, 지역상사·DMO²⁰ 등 더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기업과 전국적인 연계를 촉진하는 동시에 인재 수요의 발굴·매칭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사업자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지방대학과 실무 경험을 보유한 기업 출신자와의 매칭도 추진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베이스에서 스스로 작동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재구축을 목표로 지역금융기관 등과의 연계를 강화한다.²¹

- ‘프로페셔널 인재 전략거점’ 사업은 주로 지역의 중핵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중소기업의 경영 인재 수요 파악 및 인재 공급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 인재 회사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최근에 ‘신현역교류회’라는 명칭으로 주로 수도권 내 일부 지역금융기관의 관여하에 거래 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의욕이 있는 대기업 OB·OG가 한자리에 모여서 면담·매칭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 및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이동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단체의 협력을 얻어서 대기업 OB·OG의 리스트를 작성한다. 또한 개최 실적이 없는 지역의 지역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개최하는 경우에는 지방창생추진교부금에 의한 지원도 검토하고, 이를 전국의 지역금융기관에 주지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 추진

- ‘분산형 에너지 어드바이저(가칭)’의 창설 및 지방자치단체 파견을 통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스타트업 창구를 구축함으로써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늘릴 수 있도록 한다.
- 사업화에 필요한 현장 지식과 전문적 어드바이스가 가능한 인재(‘지역살리기 기업인’ 등)의 매칭 지원과 사업화를 위한 매뉴얼의 정비, 관계부처와 연계한 ‘총무성 사업화 원스톱 상담창구’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다.

²⁰ Destination Management/Marketing Organization의 약어. 다양한 지역 자원을 조합한 관광지의 대표 브랜드화, 웹·SNS 등을 활용한 프로모션,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대해 지역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관광지역 만들기의 추진 주체.

²¹ 금융청도 2018년 3월에 은행 본사 및 그 자회사 등에서 거래기업에 대한 인재 소개업무의 취급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개정했음.

(3) 관광지역 만들기·브랜드화 등의 추진

● 개요

관광입국·관광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개성을 살린 매력 있는 관광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고, 지역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관광지 경영이라는 관점에 입각한 관광지역 만들기·브랜드화의 주체인 DMO의 형성·육성을 가속화한다. 또한 오래된 민가 등 지역 자원의 매력을 높이는 시책과 함께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지역 만들기·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스포츠 투어리즘 등 스포츠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일본 각지에 존재하는 산업 유산은 그 지역만이 아니라 일본 전체 산업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귀중한 자산이다. 산업 유산에 관한 홍보 기능을 정비해 관광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이 특색을 갖게 하고, 관련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을 촉진한다.

● 구체적 추진 방안

DMO가 주도하는 관광지역 만들기·브랜드화 추진

- 2017년 말 현재 70개소의 일본판 DMO와 128개소의 일본판 DMO 후보 법인이 등록되어 있다. 2020년까지 세계 수준의 DMO(선구적 인바운드형 DMO) 100개소를 조직하기 위해 정보·인재·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이와 함께 적절한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DMO 간의 광역적 연계를 촉진한다.
- 정보 지원: ‘DMO net’을 통해 DMO의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고, DMO 활동을 서포트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 및 인재와의 매칭, DMO 간의 연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의한 컨설팅 지원과 프로모션 노하우의 제공을 촉진한다.
- 인재 지원: 해외 선형 사례의 시사점이 반영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제공과 ‘지방 창생 칼리지’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 재정 지원: 지방창생추진교부금과 국토교통성의 ‘광역 주유 관광 촉진을 위한 새로운 관광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일본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관·민펀드 등에 의한 투자를 촉진하고 DMO의 안정적인 운영자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오래된 민가 등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을 만들기 추진

-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전국 200개 지역에서 오래된 민가 등의 역사적 자원을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책인 ‘중요 전통적 건조물

군 보존지구’, ‘역사적 풍치 유지향상계획 인정 도시’를 시행한다.

-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을 만들기 관·민연계 추진팀’에 의한 컨설팅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 오래된 민가 등 지역 자원 활용을 위한 자금 조달과 브랜드화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요리사와 ‘농박(農泊)지역’ 간 매칭 지원, 오래된 민가 등의 활용을 담당할 주체 발굴, 연수프로그램의 작성·시행, 전문가 파견에 의한 인재 육성 지원뿐만 아니라 SNS 등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해외 홍보를 강화한다. 농박(農泊) 지원을 통해 농산어촌의 소득 향상과 활성화를 실현하고, 개정된 건축기준법 관련 규제·제도의 활용을 촉진하며, 역사적 건축물의 활용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보급한다.

스포츠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 2020년까지 스포츠를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를 250만 명 정도로 늘리기 위해 2018년 3월에 수립한 ‘스포츠 투어리즘 수요 확대 전략’에 따라 국내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특히 일본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고 방일 개인여행자 등의 수요 확대에 유망한 분야인 무도(武道)의 견학·체험과 아웃도어 스포츠를 신규 중점 테마로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재의 확보를 촉진하는 등 스타디움·아레나를 중심으로 지역 전체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 2018년 중에 모든 대학과 모든 경기 종목이 참여하는 총괄 조직(일본관 NCAA)²²을 창설해 스포츠 이벤트와 합숙 활용 등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 진흥

- 2018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의 종합적인 보존·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매력 있는 지역 만들기에 활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지원한다. 문화재를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관광객 증가가 다시 문화재 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지역 활성화의 선순환 고리를 창출하기 위한 시책을 지원하고, 일본의 자랑거리인 전통 예능과 ‘와자(技)’²³의 국내외 홍보를 추진한다.

²² 대학 스포츠의 선진국인 미국의 NCAA(전미대학체육협회 :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와 같이 모든 대학과 모든 경기종목을 아우르는 총괄 조직을 참고로, 인재와 시설 등의 대학 스포츠 자원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본에서도 그 창설을 검토하고 있는 대학 운동부 활동의 총괄 조직.

²³ 폭예, 구경거리, 연극, 음식점 등 서민의 오락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편집자 주).

지역의 다양한 산업 유산을 활용한 관광 진흥

- 세계문화유산인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을 비롯해 산업 유산을 활용한 관광 진흥의 일환으로서 조사 연구·인재 육성·정보 제공의 종합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산업유산정보센터' 설치를 2018년에 착수한다.

(4) 근미래기술(近未來技術)의 실증 및 실험

● 개요

근미래기술 실증·실험에 의한 새로운 지방 창생을 목표로 지방 창생의 관점에서 혁신적이고, 선도적이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시책에 대해 지방창생추진교부금 등 관계부처의 지원을 추진한다.

● 구체적 추진 방안

근미래기술의 실증·실험에 의한 새로운 지방 창생

- 「미래투자전략 2017」(2017년 6월 9일 각의결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Society 5.0을 위한 5대 전략 분야와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프로그램(SIP)'의 성과 등을 포함해 최신 과학 기술과 지식을 활용한 지방 창생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제안 중에서 선도적이고,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뛰어난 제안에 대해서는 지방창생추진교부금과 지역경제 순환창조사업 교부금, 농산어촌진흥교부금 등 관계부처별 지원책을 패키지로 실시하는 체제를 정비해 근미래기술의 실증·실험을 통한 새로운 지방 창생을 지향한다.
- 2020년에 실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초고속·다수접속·초저지연(超低遲延) 통신을 실현하는 5세대 이동통신시스템(5G)을 활용해 지역 산업의 진흥과 지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지방 창생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2018년에도 5G의 지역 전개 및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증을 실시해 지방·전국 전개를 위한 모델로 광범위하게 제시한다. 또한 5G 등의 고도 무선 환경을 뒷받침하는 광섬유망 정비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실시해 2018년 여름까지는 결론을 얻도록 한다.
- '근미래기술 실장(実装) 관계부처 연합회의'(2018년 2월 15일부터 개최)에서 각종 보조금과 특구의 특례 적용 등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특별행정기관 등 포함),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근미래기술 지역 실장(実装) 협의회'를 구축하고 복수의 특별행정기관에 걸치는 '윈스톱지원'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이고 범부처적인 지원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한다.

3.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 이동 흐름 만들기

(1) '반짝반짝 빛나는 지방대학 만들기' 등 지역 청년 학업 및 취업 촉진

● 개요

최근 지방의 청년층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도쿄권 초과 전입 인구의 대부분은 청년층이다. 특히 18세 인구는 2016년 약 120만 명에서 2040년에는 약 88만 명으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8년 정기국회에서 제정된 「지역대학의 진흥 및 청년 고용 기회 창출을 통한 청년 학업 및 취업 촉진에 관한 법률」(2018년 법률 제37호)에 따라 지역의 대학 진흥 및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교부금제도, 도쿄 23구 내 대학 학부의 수용 정원 억제, 지역의 청년 고용 기회 창출 등을 통해 지역의 청년 학업 및 취업 촉진을 추진한다.

청년층의 UII턴과 지역 정착 촉진을 위한 시책으로 장학금 반환 지원의 전국 확산, 지방 권과 도쿄권 대학생 간 대류·교류 촉진, '지방 창생 인턴십' 추진, 새틀라이트(Satellite) 캠퍼스의 설치로 이어지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지역문제의 해결 등에 관한 학습기회를 제공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 구체적 추진 방안

지역 대학의 진흥 및 청년 고용 기회의 창출을 통한 청년 학업 및 취업 촉진

-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으로 산·관·학 연계에 의해 첨단 과학, 농업, 관광 등 지역의 핵심 산업 진흥과 전문 인재 육성 등을 추진하는 우수한 시책에 대해서는 '지방대학·지역산업창생교부금'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국가는 해당 시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등에 의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일본 전국과 세계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여드는 '반짝반짝 빛나는 지방대학 만들기'를 추진하고 지역의 청년 고용 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 도쿄 23구 내 대학 학부의 수용 정원 억제는 2020년도 대학 설치 등에 대해 문부과학성대신에게 인가 신청이 예정되어 있는 2018년 10월까지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도쿄 23구 내 대학 학부의 수용 정원을 파악해 정원 억제 관련 제도의 적정한 운용 지침을 확보한다.

청년 세대의 UII턴과 지역 정착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 지역기업에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도도부현 수는 2018년 32개 부현(실시 예정 1현 포함)으로, 전년도보다 6개 현이 증가했다. 앞으로

사례집 작성과 홍보 등을 통해 시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제도의 효과 검증을 토대로 필요한 방안을 검토해 연내에 최종안을 도출한다.

- ‘지방 창생 인턴십’에 대해서는 ‘지방 창생 인턴십 포털사이트’를 충실하게 보강하고 지방 자치단체와 수도권 대학 간 긴밀한 연계 체제 구축을 촉진하는 플랫폼 형성을 추진한다.
- 도쿄권 대학의 지방 새틀라이트 캠퍼스 설치(폐교사 등의 활용 포함)에 대해서는 매칭 시스템의 구체화를 추진한다.
- 지방 창생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실시해 온 지방 이주에 따른 초·중학교의 ‘구역 외 취학 제도’의 활용 촉진과 함께 지방 고등학교에 대한 지역 외 취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와 매력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학생이 지방과 도쿄권을 상호 대류·교류할 수 있는 시책을 강화한다.

지방 창생에 기여하는 고등학교 개혁 추진

- 고등학교는 지역 인재의 육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단계에서 지역의 산업과 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향후의 지역 정착과 U턴 등에도 도움이 된다.
- 고등학교가 시정촌·기업 등과 연계하면서 고등학생에게 지역 문제의 해결 등을 통한 탐구적인 학습을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구축하고 진로 결정 후의 기간을 이용한 인턴십 등을 통해 지역의 매력에 접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 이와 같은 시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와 시정촌 등 지역 관계자 간에 계속적이고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하나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 관계자에 의한 컨소시엄 설치 등 고등학교를 활용한 지역 기반 구축 사례를 소개한다.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등에서의 실천적 직업교육 추진

- 실천적·창조적 기술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전문학교의 고도화와 함께 대학·전문학교에서의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대학 개설 등을 통해 실천적인 직업교육을 추진한다.

(2) 지방으로의 기업 본사 기능 이전 촉진

● 개요

도쿄 일극집중을 완화하고 도쿄에서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 이동 흐름을 만들어 내기 위

해서는 지방에서 안정적인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거점 강화 세제’와 2018년의 「지역재생법」(2005년 법률 제24호)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의 이용 촉진을 위한 기업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으로의 기업 본사 이전·확충을 촉진한다.

● 구체적 추진 방안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대상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한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추진

- 2018년의 세제 개정을 통해 소규모 오피스의 이전 및 확충도 지방거점 강화 세제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고, 이전형 사업의 대상 지역도 추가되었다.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 관계 단체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널리 주지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기업 유치 세미나 등과 연계해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친다. 또한 지방으로 본사 기능을 이전 또는 확충한 사례 중에서 지방 근무의 매력적인 점들을 수집해 전국에 홍보함으로써 기업 본사 기능의 지방 이전 또는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 본사 기능의 이전 등을 검토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에 대응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관련 시책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본사 기능의 지방 이전 및 확충을 검토하는 기업이 용이하게 이전·확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를 추진한다.

(3) ‘생애활약마을’ 추진

● 개요

「지역재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조치(2018년 3월 현재 ‘생애활약마을 형성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19개 시·정(市·町)의 지역재생계획 인정)나 지방창업 관련 교부금을 활용해 ‘생애활약마을’의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증가(‘생애활약마을 형성 지원팀’의 대상 지방자치단체(16개 단체)에서는 지역 교류거점과 체험 거주주택을 9개소에서 정비)하고 있으나, 인재와 노하우 부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좋은 사례와 노하우를 수집해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 사업의 특징과 문제에 대응한 세부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등 KPI가 달성될 수 있도록 ‘생애활약마을’ 만들기를 더욱 강력하게 지원해 가도록 한다(2017년 10월 1일 현재, 관련 시책 추진 지방자치단체 수 : 79개).

● 구체적 추진 방안

‘생애활약마을’ 추진

- ‘생애활약마을 형성 지원팀’의 대상 지방자치단체와 의견 교환 및 관련 사업자와 인터뷰 등을 통해 거주지와 활약 장소, 의료·복지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특징적인 사업 내용과 문제 등을 정리·유형화해 사례집을 작성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원 톨을 활용하면서 ‘생애활약마을’의 추진에 적극적인 도도부현과의 연계하여 ‘생애활약마을’ 구상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한다.
- ‘생애활약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이주 추진사업이나 관련 시설의 건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있으나, 사업을 추진해 갈 인재나 운영사업자의 확보에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도 있다. 따라서 사업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관계 부처와 민간사업자가 연계한 세미나를 개최해 제도를 소개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생애활약마을’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지원한다.

(4) 정부 관계기관의 지방 이전

● 개요

「총합전략」 및 「정부 관계기관 이전 기본방침」(2016년 3월 22일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결정), 「정부 관계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2016년 9월 1일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결정, 이하 「지방이전에 관한 향후 추진방향」이라 함) 등에 근거해 중앙부처 및 연구기관·연수기관 등의 이전을 착실히 추진한다.

● 구체적 추진 방안

정부 관계기관 이전의 착실한 추진

- 연구기관·연수기관 등의 지방 이전은 관계자 간에 공동으로 작성한 5년 정도의 연차별 계획에 입각해 장래의 지역 이노베이션 실현을 목표로 착실하게 추진한다.
- 중앙부처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 문화청은 2017년 4월에 본격적 이전 준비를 위해 ‘지역문화 창생본부’를 교토에 설치했고, 동년 7월에는 교토 본청의 조직체제, 장소, 이전 시기 등을 결정했다. 2018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문부과학성설치법」 등에 근거해 문화청의 기능 강화 및 획기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2017년 7월의 ‘문화청 이전

- 협의회' 결정에 따라 앞으로도 전면적 이전을 위한 작업을 착실하게 추진한다.
- 소비자청은 2017년 7월에 도쿠시마현에 개설된 '소비자행정 신미래 창조 오피스'를 거점으로 하는 이전 방식에 대해서 2019년을 목표로 검증·재검토를 실시하여 결론을 얻도록 한다.
 - 총무성 통계국은 2018년 4월 와카야마현에 '통계 데이터 이·활용센터'를 개설했다. 앞으로 와카야마현과 협력해 지방 창생에 필요한 통계데이터의 이·활용을 추진한다.
 - 특허청, 중소기업청, 관광청, 기상청은 「지방이전에 관한 향후 추진방향」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추진한다.
 - 정부 관계기관의 지방이전 시책이 지방창생추진교부금, 지방대학 진흥 등 다른 시책과의 상승 효과를 통해 지역 이노베이션의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관계기관 이전 관련 전문가 간담회'의 의견 수렴을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 매년 점검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
 -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 발휘 여부를 검증(사회실험)하기 위해 이전 기본방침에 따라 ICT를 활용한 실증·실험을 시행하고 검토한다.
 - 중앙부처의 새틀라이트 오피스는, 지방에서 수행할 때 질적 향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업무에 대한 일부 부처·청에서의 시행 및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에서 실시할 필요성과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중 내각부에서는 2017년의 시행 결과에 근거해 전국의 각 지방 블록에 새틀라이트 오피스를 순차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창생업무에 대한 현장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4. 청년 세대의 결혼·출산·육아 희망 실현하기

(1) '지역 일하는 방식 개혁회의'에서의 '일하는 방식 개혁' 실천 등

● 개요

출산율 및 출산율과 관련된 각종 지표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며, 출산율 저하의 요인인 만혼과 고령출산의 정도, 그리고 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일하는 방식'과 소득, 지역·가족의 지원에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인 시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노사단체, 금융기관 등의 지역 관계자로 구성된 '지역 일하는 방식 개혁회의'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일하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도출하고, 관계부처·청이 일체가

되어 이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청년들이 일하는 방식에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도록 전국 규모의 기업에 의한 지방에서의 채용활동을 확대하고, 지역기업의 우량기업 여부를 알 수 있게 한다.

● 구체적 추진 방안

‘지역 일하는 방식 개혁회의’의 시책 지원

-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계획’(2017년 3월 28일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 결정)의 진척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워크 라이프 밸런스 추진, 장시간 노동지양, 여성 활약 촉진 등 각 지역의 ‘지역 일하는 방식 개혁회의’에서 결정된 ‘일하는 방식 개혁’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일하는 방식 개혁 지원팀’에서 ‘지역 일하는 방식 개혁회의’의 요구에 부응해 필요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각 지역의 특징적인 시책과 실제 시행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에서의 시책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 일하는 방식 개혁회의’에서의 시책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저출산 및 일하는 방식 지표’와 ‘지역 저출산 시책 검토를 위한 지침’을 필요에 따라 개정해 제공한다.
- 지역에서의 시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관련 지표의 도도부현별 현황을 제공하고,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시책들이 공개되어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한다.

선구적이고 우수한 시책의 전국적 확산

- 지역의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을 위해 선진적인 시책을 보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일하는 방식 개혁’에 대한 윈스톱의 포괄적 지원거점 정비(2017년 말 현재 정비실적 : 19개 현), ‘일하는 방식 개혁 어드바이저’를 양성해 기업에 직접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상담 지원 등을 실시하는 ‘아웃리치 지원’(2017년 말 현재 파견사업 실시 실적 : 44개 현), 한부모 가정과 청년 실업자 등의 지방 취업·자립을 지원하는 시책 등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활용한 시책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취업에 관한 다양한 선택지의 제공

- 지역의 청년이 지역 우량기업의 존재를 인지하고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취업할 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채용과 인재 육성에 적극적인 기업과 ‘일하는 방식 개혁’에 열

심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 도쿄에 본사를 둔 대기업 등에는 지역한정 근무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지방에서 적극적인 채용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조사·분석해 유사 사례의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2) 신생아 수와 출산율 향상에 관한 우수 시책 사례 확산

● 개요

일본 전체적으로는 신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거나 신생아 수 및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시정촌도 일부 존재한다. 이러한 사례의 배경 요인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조사하고 연구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 가능하도록 사례를 정리하고 우수사례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한다.

● 구체적 추진 방안

신생아 수와 출산율의 향상을 실현한 우수사례의 전국적 확산

-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거나 신생아수·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시정촌도 일부 존재한다. 그 배경에는 행정·민간에 의한 각종 지원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청년 세대 남녀 모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양호한 취업(就業) 환경, 안심하고 어린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양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민간을 포함해 이러한 지역들에서 추진된 각종 시책을 폭넓은 관점에서 조사·분석하고, 연내에 그 결과를 정리해 홍보함으로써 전국의 각 지역들이 자기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시대에 적합한 지역 만들기, 안심 생활을 위한 지역과 지역의 연계

(1) 마을 만들기를 통한 지역 연계 추진

● 개요

인구감소 및 저출산·고령사회에서도 일정한 권역 인구를 확보하여 활력 있는 사회·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점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연계중추도시권 형성 시책을 전국적

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시책의 구체화를 지원한다. 권역 전체적으로 필요한 생활기능 등을 확보하고 지방권의 정주기반 형성을 위해 정주자립권 형성 시책 추진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권역별 시책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지역과 지역이 연계해 새로운 '돈벌이 역량' 과 인구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도부현을 뛰어넘는 광역적 지역 만들기를 추진한다. 도쿄 23구와 전국 각 지역 간 연계 촉진을 통해 전국 각 지역의 산업 진흥과 관광 진흥을 도모하는 시책을 추진한다. 일정 규모의 인구와 도시 기능을 가진 도시권을 대상으로 인구 동태 등을 분석하여, 관계부처와의 연계하에 광역권 단위로 인구의 집적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방책 등에 대해 검토한다.

● 구체적 추진 방안

연계중추도시권 시책 내용의 구체화

- 2020년까지 30개 연계중추도시권 형성을 목표로 한다(2018년 4월 1일 현재 : 28권역).
- 연계중추도시권 구상 도입 후 3년이 경과하면서 각지에서 관련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권역별 시책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2018년 중에 권역 단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연계중추도시권 구상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정주자립권 시책 내용의 구체화

- 2020년까지 140개 정주자립권 형성을 목표로 한다(2018년 4월 1일 현재 : 121권역).
- 정주자립권 제도 도입 후 8년이 경과하면서 각지에서 관련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권역별 시책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2018년 중에 권역 단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정주자립권 구상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도도부현을 뛰어넘는 연계에 의한 광역적 지역 만들기 추진

- 「광역지방계획」(2016년 3월 국토교통대신 결정)에서 설정한 116개 광역연계프로젝트의 구체화를 추진하고 도도부현을 뛰어넘는 지역 간 연계에 의한 광역적 지역 만들기를 추진한다. 특히 선도 프로젝트로서 사례 형성을 지원하고 있는 13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역 주도 운영체제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다.

도쿄 23구와 전국 각 지역과의 연계 추진

- 도쿄 23구에서 전국 각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이벤트와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는 등 도쿄 23구와 전국 각 지역 간 연계를 촉진한다.

(2) 에어리어 매니지먼트(Area Management) 등에 의한 마을 만들기 추진

● 개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재생법」 개정에 의해 창설된 ‘지역재생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부담금’ 제도를 포함한 에어리어 매니지먼트를 통해 지역의 ‘돈 벌이 역량’과 ‘지역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돈 버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 마을의 번영과 활력을 창출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소득·고용의 증가로 연결되게 한다. 지방 창생의 추진을 위해 지방에서 확대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한 관광 진흥, 건강장수 사업에 부동산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 구체적 시책

‘지역재생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부담금’ 제도의 활용 추진

- ‘지역재생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부담금’ 제도²⁴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창생추진교부금 등을 통해 제도를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활동을 정착 및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한다.

공공 공간에의 민간 활력 도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 등

- 「도시공원법」(1956년 법률 제7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 설치 관리제도’와 ‘시민 녹지 인정제도’를 활용해 민간자금이 의한 공원의 재생·활성화와 녹지 창출을 촉진하는 등 공공 공간에 민간의 힘을 끌어들이어 마을의 활력 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민간 마을 만들기 활동 촉진

-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단체의 보급·계발 사업과 실증사업 등(‘도시 편리성 증진협정’에 근거한 광장의 정비, 공공 공간의 활용 실험 등)을 지원하고 단체 간 연계를 통한 지역 자원 활용 체제를 구축한다.

지방도시에서의 「돈 버는 마을 만들기」 추진 등

- 2018년 3월에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작성한 ‘돈 버는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포괄적 정책 패키지 2018’과 돈 버는 마을 만들기 추진 사례집인 「지역의 챌린지 100」(2017년 3월)

²⁴ 시정촌이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활동(지역재생에 기여해야 함)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로부터 징수해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단체에 교부하는 관·민 연계형 제도로써 2018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지역재생법」에 의해 창설.

등에 대해 지역의 마을 만들기 담당자에게 주지하고, 돈 버는 마을 만들기 시책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 지방 창생 추진을 위해 지방에서 확대하는 수요에 대응한 관광 진흥과 건강장수 등의 사업에 부동산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 창생형 부동산 증권화 제도인 ‘소규모 부동산 특정 공동사업’의 활용을 추진하는 동시에 2018년 3월에 발간된 「지방 창생에 기여하는 부동산 유통화·증권화 사례집」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부동산 사업자, 금융기관 등에 주지한다.
- 2018년 3월에 각의에서 결정된 ‘중심시가지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본적 방침’의 일부 변경에 근거해 설치된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청 연합회의’ 등으로 매력 있는 지방도시의 거점으로서 사람들이 모이는 ‘마을의 변화함’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청의 연계를 강화하고 상업, 문화, 교육, 의료, 복지, 거주 등 복합적인 기능 정비를 지원한다. 또한 외국 관광객의 수요 대응 및 매력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중심시가지·상점가에 대한 마을 만들기 인재를 확보·육성하고, 마을 만들기 관련 추진 체제를 강화하며, 지역에 대한 임팩트 및 파급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 2018년 3월에 수립된 「Projection Mapping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Projection Mapping 등의 옥외 광고물에 의한 마을 활성화 사례와 실시 촉진을 위한 방책 등을 주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돈 버는 마을 만들기’ 추진을 지원한다.

마을 만들기 금융 지원의 새로운 방법

- 빈 점포, 오래된 민가 등 유휴자산의 리노베이션을 시행하는 민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연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민간 도시개발 추진기구’(민도기구)가 지역금융기관과 연계해 설립하는 펀드의 조성을 추진한다.
- 클라우드 펀딩의 활용과 함께 민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도기구와 지방자치단체가 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재정 부담을 덜고 시책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Social Impact Bond(SIB)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3) '콤팩트+네트워크'의 본격적 추진

●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입지적정화계획 및 '지역 대중교통망 형성계획' 작성이 진행되면서 콤팩트+네트워크는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있다(2017년 말 현재 입지적정화계획은 142개 지자체가, '지역 대중교통망 형성계획'은 410개 지자체가 작성). '콤팩트시티 형성 지원팀' 체제를 통해 도시의 콤팩트화와 편리한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책을 범부처적으로 지원하고, 모범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전국적 확산을 추진한다.

빈 땅을 비롯한 저·미이용지가 시·공간적으로 랜덤하게 발생해 거주 및 도시 기능의 유도과 집약을 방해하는 '도시의 스폰지화'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2002년 법률 제22호)에 의한 신제도를 활용해 저·미이용지의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노후화되고 넓게 흩어져 있는 공공·공익시설의 갱신 및 재편사업 촉진을 위해 민간의 자금 및 노하우를 활용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 구체적 추진 방안

콤팩트+네트워크의 본격적 추진

- 입지적정화계획, '지역 대중교통망 형성계획' 등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관계 부처가 연계해 컨설팅과 지원 시책을 계속하여 충실히 실시하고 콤팩트+네트워크 시책의 저변을 확대한다.
- 인공지능(AI)·IoT 등의 선진 기술을 마을 만들기 분야에 도입해 도시기능의 고도화, 인프라 정비 및 관리, 도시 활동의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선진적 기술의 활용에 관한 다양한 제안을 바탕으로 관·민 협동의 실증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확대를 전제로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며 범분야적인 데이터 연계를 위한 기반·체제 정비를 지원하는 등 스마트시티의 시책을 추진한다. AI·Io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 만들기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과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이·활용을 알기 쉽게 조언하는 멘토 인재의 육성 방안에 대해 2018년 여름까지는 결론을 도출한다.
- 도시의 콤팩트화와 지역의 '돈벌이 역량' 강화를 하드·소프트 양면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생 모델도시(지방재생 콤팩트시티)로 선정된 32개 도시는 각종 지원 메뉴를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인구 특성(성별·연령·세대인 수 등)별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편리성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시설 입지를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플래닝'에

- 대해서, 시범 도시에서의 검증을 통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다른 도시로 전개해 나간다.
- 건강 및 경제적 효과에 관한 지표 개발 및 제공을 통해 시정촌이 추진하는 시책의 성과가 눈에 보이도록 하는 한편 효과 검증을 촉진하고 관계부처·청이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지원 메뉴를 충실화한다. 사람의 이동에 관한 빅데이터 해석 등을 통해서 사용자의 눈높이에서 최적의 시설배치 계획 수법을 개발하고 대중교통의 편리성 향상을 추진한다.
 - 공유 경제의 보급,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 등 사회 정세의 변화를 감안해 주택시가지를 둘러싼 문제를 정리하고 재생 방안을 검토한다.
 - 2018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도시재생특별조치법」(2002년 법률 제22호)에서 스폰지화 시책으로 도입된 신제도를 알리고 보급해 지역의 저·미이용지 이용 촉진 및 집약·재편을 촉진하고 지역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공공시설을 정비·관리하는 시책을 추진한다.
 - 관·민 협동에 의해 도시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계획 정보를 오픈데이터화하고 데이터를 손쉽게 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2018년 내에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 ‘지역 대중교통망 형성계획’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역 대중교통망 형성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을 개정하여 계획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대중교통 재편 실시계획’의 이행을 촉진한다.
 - ‘지역 대중교통 활성화 및 재생 미래상을 생각하는 간담회’의 검토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강화와 지역 대중교통망 형성 우수사례의 공유를 통해 마을 활력 창출에 기여하는 지역 대중교통망의 형성을 촉진한다.
 - 전국 대중교통기관의 경로 검색을 확충하기 위한 정보의 정비와 오픈데이터화를 추진하고, 지역 독자카드 도입지역에서도 전국에서 상호 이용이 가능한 교통 IC카드를 사용 가능하게 하는 ‘편이용(片利用) 공통접속시스템’의 도입을 촉진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ICT·자율주행 등의 신기술 활용과 마을 만들기와 연계, 안부확인 서비스의 도입, 과소 지역에서의 화물·여객 혼합 적재, MaaS²⁵의 실현 등 다양한 분야와 지역 대중교통과의 시책 연계를 통해 이용자 수요에 꼭 맞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모델을 구축한다.

²⁵ Mobility as a Service의 줄임말.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 수요에 대해 최적의 이동수단을 단절 없이 제공하는 등 이동을 단순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일원적 서비스로 받아들이는 개념.

- 도시기능 유도구역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평준화하고 민간사업자의 리스크를 경감하는 등 민간 도시개발사업과 일체화된 공공·공익시설의 갱신·재편을 위한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4) 유희자산 활용을 통한 지역의 '돈벌이 역량' 강화

● 개요

지역의 '돈벌이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유희자산의 유효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경제 재생의 중심이자 지역의 얼굴인 상점가에서는 빈 점포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지역재생법」에서 상점가 활성화를 통해 지역재생을 추진하는 계획제도 및 특례조치를 창설하고 있다. 각 부처로 구성되는 지원팀을 출범하고, 본 제도를 활용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자산의 활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공유 경제 활용 추진사업'을 통해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및 새로운 생활산업의 도입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 구체적 추진 방안

빈 점포 등의 유효 활용을 위한 시책 촉진

- 상점가 활성화를 통한 지역재생을 목표로 새로운 계획제도를 활용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를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로 구성된 지원팀을 설치하고 각 지역의 관련 추진상황 공유 및 지원을 촉진한다.

공유 경제를 활용한 지역자산의 효율적 활용

- 공유 경제를 활용한 유희자산 활용을 통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생활산업을 도입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모범적 사례에 대해 2020년까지 100개 사례 실현을 염두에 두고 2017년까지 30개 사례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2017년 말 현재까지 실제 37개 모범사례가 실현되었다. 이를 감안해 2018년 중에는 모범사례 수를 두 배로 증가시킨다. 그 일환으로 '공유 경제 활용 추진사업'을 통해 사업을 모델화하고 '공유 경제 전도사' 과건을 통해 구축된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한다.

(5) 지방경제의 중추·중핵도시에 대한 투자 환기

● 개요

지방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는 중추·중핵도시에 대한 투자 환기를 위해 AI, IoT를 비롯한 Society 5.0의 혁신적 기술을 도입하는 등 세계 최첨단 도시재생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지방 창생을 가속화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쿄 일극집중 현상을 완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의 후보지역을 설정하고 도시재생의 첨단적 정보 기반인 ‘i-도시재생’을 정비하고 ‘특정 도시재생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간다.

● 구체적 추진 방안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의 후보 지역 설정

- 중추·중핵도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환기하고 도시재생을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향 등을 감안해, 필요에 따라서는 조기에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의 후보 지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 후보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민간사업자, 금융기관 등 광범위한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계의 장을 설립하고, 민간제안 기회 제공, 일정의 공유, 매력적인 안건 형성 등을 시행한다.

도시재생의 첨단적 정보 기반 ‘i-도시재생’의 정비·활용·보급

- 마을 만들기의 문제와 효과, 미래상을 지리정보와 VR 기술 등을 활용해 주민과 투자자에게 알기 쉽게 보여주는 도시재생의 첨단적 정보기반 ‘i-도시재생’을 정비해 중추·중핵도시에 대한 투자 환기로 연결한다.
- ‘i-도시재생’의 활용 및 보급을 위해 전국적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도시별로 실천 가능한 인재를 창출·확대한다.

‘특정 도시재생 중점 프로젝트’의 추진

- ‘근미래기술(近未來技術) 실증·실험 관련 프로젝트’: Society 5.0 형성에 기여하는 ‘근미래기술’을 실증·실험하기 위해 관련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 ‘슈퍼메가리전 관련 프로젝트’: ‘리니어 중앙신칸센(中央新幹線)’으로 인한 7,000만 명 규모의 집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어 일본 전체의 경제 활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6) 집락생활권 유지를 위한 ‘작은 거점’ 및 지역운영조직 형성

● 개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현저한 중산간지역 등에서는 일체적 일상생활권을 구성하고 있는 집락생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래에도 지역주민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주체인 지역운영조직을 설립하고, 생활서비스 기능의 집약 및 확보, 집락생활권 내외의 교통 네트워크에 의한 ‘작은 거점’을 형성해 편리한 지역으로 만들어 간다.

● 구체적 추진 방안

‘작은 거점’ 형성 추진

- 2017년 5월 현재 전국적으로 908개소가 형성되어 있는 ‘작은 거점’을 1,000개소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청이 연계해 관련 시책을 계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새롭게 작성된 「법인화 가이드북」과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전국 포럼, ‘지방 창생 칼리지’ 등에 의한 정보 지원 및 인재 지원을 시행한다.
- ‘작은 거점’ 형성을 위해 미치노에키(道の駅)를 활용하고 관·민 연계를 추진한다. 새로운 인구 유치를 위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도시부에서 과소지역 등의 지방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전원 회귀의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이주자를 위한 지원체제 정비(상담 창구와 거주 체험 제공, 주택 소개 등)를 추진한다.

지역운영조직에 대한 지속적 지원

- 지역운영조직은 2017년 현재 4,177개 단체가 조직되어 있으며, 5,000개 단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운영조직에 관한 전문가회의’의 최종보고(2016년 12월 13일)에 따라 지역운영조직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지역운영조직의 형성 및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인재 육성·확보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운영조직의 실태를 조사·연구하고 지원한다.
- 지역의 실정과 수요에 대응한 지역운영조직의 법인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법인제도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추진하고 커뮤니티 조직의 법인화 촉진을 위해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한다.
- 지역운영조직의 형성 및 지속적인 운영과 지역에서의 고용 창출을 위해 ‘작은 거점’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주식회사의 출자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조치의 활용 촉진을 통해 지역운영조직의 자금 조달력을 제고한다. 또한 「지역재생법」의 개정에 의해

신규 설립 시의 출자도 특례조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널리 알린다.

(7) 지역 공생 사회의 실현

● 개요

누구든지 살기 익숙한 지역에서 ‘나’다운 생활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의료·복지·주거·생활 지원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지역 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과 지역산업이라고 하는 영역을 넘어 지역주민과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과 삶의 보람, 그리고 지역을 함께 창조해 나가는 지역 공생 사회를 실현함으로써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에 의한 세대 구조의 변화 및 개인과 세대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복합화에 대응해 간다.

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의 대상자별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요의 복합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발상을 지원한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향후 의료·복지 수요 증대 및 지역의 다양한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잠재적 유자격자’(전문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 분야에 취업하고 있지 않은 자)의 발굴과 함께 다양한 커리어 패스(Career Path) 구축 등을 통해 인재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자뿐 아니라 청년층과 근로 세대 등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추진한다.

● 구체적 추진 방안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지원 체제 강화

- 지역과 개인이 안고 있는 다양한 생활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법」(1951년 법률 제45호)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행정 등이 협동하면서 공적 체제에 의한 지원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포괄적 지원 체제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 시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2017년도는 85개 지자체, 2018년도는 150개 지자체 정도)하고, 전국적 확산을 위한 문제와 논점 등을 정리한다.
- ‘지역 공생 사회’의 실현을 위해 개정된 「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에 근거해 취업·가계·주거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생활곤궁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체제의 정비를 추진한다.

-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민간활력을 활용함으로써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사회적 사업 개발 및 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 만들기, 생활근공자 시책, 아동복지 시책, 지역 커뮤니티 만들기 등의 다양한 사업 분야에 대해 ‘사회적 임팩트 투자’의 프레임을 활용한 ‘사회적 사업’의 실험적인 실시를 통해 성과지표의 설정 등과 같은 환경을 정비하고, 추진상의 문제와 유효성을 검증한다.
- 고령자와 장애인이 동일한 사업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개호보험²⁶과 장애복지의 양 제도에서 ‘공생형 서비스’를 창설하는 등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다세대·다기능형의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실현해 나간다.
- 취업에 곤란을 안고 있는 자의 취업 및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 취업·생활 지원센터’의 노하우를 활용해 장애가 의심되는 생활근공자에 대한 취업·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다른 취업 지원 기관과의 연계를 추진하는 등 포괄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전문 인재의 기능 강화 및 최대 활용

- 주민과 함께 지역을 만들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해 생활 속에서 개개인에 밀착한 지원을 시행한다는 관점에서 전문성 확보에 배려하면서 보건의료 복지의 공통 기초과정 창설을 검토해 2021년 실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그때까지 당면한 조치로서 복지계 국가자격 소유자(개호복지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가 보육사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자격 양성 과정에서 습득한 복지의 기초에 관한 시험과목을 수험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질병 예방과 건강 만들기의 추진을 통한 지역 활성화

-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이 자립적으로 계속되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의 자원과 지혜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효과적·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의료기관 등 광범위한 관계자들과 협동해 관광·복지·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관련 시책 등과의 연계하고 있는 사례, 성과연동형 지불 제도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 등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을 찾아 홍보한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건강 증진 시책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동 체제 정비를 지원한다.
- 인생 100년 시대를 염두에 두고 건강 수명의 연장을 위해 지역 고령자가 다니는 장소를

²⁶ 스스로 일상생활을 꾸려나가지 못하는 ‘개호’ 상태인 노인들의 보장수요를 겨냥한 일본의 간병보험상품(편집자 주).

중심으로 하여 건강 관리, Frail²⁷ 시책(운동, 구강, 영양 등)과 생활습관병 등의 질병 예방 및 중증화 예방의 종합적 실시를 검토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추진

● 개요

지금까지 추진해 온 ‘환경미래도시’ 구상은 환경·사회·경제의 세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의한 마을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SDGs의 이념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미래도시를 SDGs 시책의 선행 사례로 볼 수 있으며, SDGs의 추진을 위해서는 그 구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SDGs의 국내 실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지역에서 활약하는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 SDGs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²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2020년 30%라는 수치목표(KPI)의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SDGs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SDGs 미래도시’를 선정해 모델 사업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계속한다.

● 구체적 추진 방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급 촉진 활동 전개

- SDGs와 관련된 주체 간 지식 교류의 장으로서, 지금까지 실시해 온 ‘환경미래도시’ 구상 관련 국제 포럼 개최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SDGs 이해 촉진 및 보급 계발을 위한 포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SDGs 달성 모델 사례 형성

-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다양한 만큼 SDGs 시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시책을 제안하는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SDGs 미래도시’로 선정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선도적인 제안을 모델 사업으로 선정해 SDGs의 달성을 위한 사업과 SDGs의 이해 촉진 및 보급 계발을 위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관계부처·청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자체 SDGs 추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관계부

²⁷ 복지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기 전 단계를 의미하나, 신체적 취약성만이 아닌 정신적·심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 등의 다면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자립장애와 사망을 포함한 건강장애를 일으키기 쉬운 하이리스크 상태를 의미함.

²⁸ 2017년에 내각부 지방 창생 추진사무국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추계치임.

치·청의 관련 예산에 의한 보조 사업 등을 활용해 강력하게 지원한다.

- 전문가 지원하에 모델 사업의 달성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수법을 확립하고, 형성된 모델 사업의 전국적 보급을 추진한다.

관·민 연계에 의한 SDGs 추진 플랫폼 구축과 민간 참여 촉진

- 지방자치단체의 SDGs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를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미래도시 구상 추진협의회’를 ‘지방 창생 SDGs 관·민 연계 플랫폼(가칭)’으로 개편하고, 지역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SDGs를 지자체의 본업으로 편입하며 비즈니스를 통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한다.

N

지방 창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 지방 창생판 '세 개의 화살'

'두근두근 지방생활 실현 정책 패키지'를 비롯한 지방 창생 시책의 추진을 위해 정보 지원, 인재 지원, 재정 지원의 지방 창생판 '세 개의 화살'로 지방자치단체를 강력하게 지원한다.

1. 정보 지원

2015년 4월부터 지역경제에 관한 관·민의 빅데이터를 알기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현황과 문제의 파악, 강점 및 약점과 미래 상 분석 등 지방 창생 시책을 정보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브라우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게 하고, 화면 표시 속도를 개선했으며 지도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RESAS 관련 정보(이벤트 등 분석 사례) 페이지를 추가했다. 또한 보급 촉진을 위해 기존의 '정책 아이디어 콘테스트' 실시에 추가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RESAS 지역경제순환맵'의 활용·분석 수법에 대한 실천적인 워크숍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데이터 갱신과 RESAS-API 데이터 갱신 등 이용자의 편리성을 향상하고 각지에서의 출장 강좌, 워크숍, '정책 아이디어 콘테스트' 등을 통한 RESAS 보급을 추진한다.

2. 인재 지원

(1) 지방 창생 칼리지(College)

지방 창생 인재를 체계적으로 확보·육성하기 위해 작성한 ‘지방 창생 인재플랜’(2015년 12월 공표)에 근거해 지방 창생의 실천적 지식을 제공하는 ‘지방 창생 칼리지’를 개강했다(2016년 12월). 복수의 양성기관(대학과 사업자 등)이 작성한 이러닝 콘텐츠를 전국 각지의 다양한 연령층·직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사무국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지방 창생 관련시책 보급 촉진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개강 후 2~3년간 수강자 10,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2017년 말 현재 이미 약 13,000명 수강). 또한 양성기관과 실천자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한 웹사이트(지방 창생 연계·교류광장)를 2017년 3월에 개설했다.

수강자의 수요와 향후의 시책 전개 등을 반영해 이러닝 콘텐츠를 더욱 충실하게 정비하고, 지방 창생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공감대 형성을 추진한다.

(2) 지방 창생 컨시어지(Concierge)

‘지방 창생 컨시어지’는 「지방관 총합전략」에 따라 지방 창생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원스톱 창구로서 기능한다. 향후에도 일상적인 상담 대응은 물론 현장 수요 파악 및 제도의 홍보를 위해 도도부현지사, 시정촌장과 ‘지방 창생 컨시어지’와의 의견 교환회를 지방을 포함해 수시로 개최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이 가능하도록 친절·정중·성실하게 상담에 대응한다.

(3) 지방 창생 인재 지원 제도

지방 창생 인재 지원 제도는 지방 창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담당할 인재를 부족하기 쉬운 소규모 시정촌에 대해 의욕 있는 국가공무원, 대학연구자, 민간인재 등을 시정촌장의 보좌역으로 파견하는 제도이다. 2015년 제도 창설 이후 지금까지 4년간 총 204개 시정촌에 인재를 파견하고 있는데, 이들은 시정촌이 「지방관 총합전략」을 기획·입안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해 본 시정촌들은 제도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2019년에도 각 부처·대학·민간기업의 협력을 얻어서 파견을 계속 추진하며, 지방 창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시정촌과 인재가 매칭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정촌과 인재들이 보다 활용하기 쉬운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모집방식에 대해서 재검토한다.

이외에도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지방 창생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다시 시정촌 및 파견인재와 공유하는 등 이 제도의 지속적 점검 체제를 충실하게 해 지방 창생 시책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3. 재정 지원

2016년에 창설된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의 경우 2017년 및 2018년 예산에서도 계속하여 1,000억 엔을 확보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시설정비비 등 하드사업에 대한 비율 제한을 완화하고 교부상한액을 인상했으며, 매년 신규 사업에 대한 교부 결정시기를 앞당김(5월 30일→4월 1일)으로써 연도 초기부터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에도 필요에 대응해 지역의 실정에 입각한 탄력적이면서 적절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창생의 강화와 새로운 전개를 위한 지방창생추진교부금 운용의 충실화 방안을 검토한다.

2018년 4월에는 지방자치단체의 KPI 설정과 사업효과 검증 방법, 특징적인 추진 사례를 정리한 「지방 창생사업 실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앞으로는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면서 전국 설명회와 개별상담, 새틀라이트 오피스를 활용한 아웃리치(Outreach) 지원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 창생 관련 교부금의 유효 활용을 촉진하고, 의욕과 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살린 특징적인 사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8년도에 창설된 ‘지방대학·지역산업 창생사업’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설명회와 개별 상담 등을 통해 사업을 널리 알린다. 사업은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교부금’과 ‘사립대학 등 개혁 총합지원사업’을 ‘지방대학·지역산업 창생교부금’ 등과 연동하여 집행함으로써 지역의 청년 학업 및 취업을 더욱 촉진한다.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사업비’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연속해 2018년에도 지방재정 계획의 세출에 1조 엔을 계상했는데, 최소한 「총합전략」 기간인 2019년도까지는 1조 엔 정도의 예산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다. 도시도 지방도 서로 의지하면서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각 지방에서 활기찬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 지방 법인 과세 시 세원 편재를 시정하는 새로운 조치를 검토해 2019년 세제 개정에서 결론을 내도록 한다.

‘고향세’는 고향과 지자체를 응원하는 납세자의 마음을 가교로 서로 돕게 하는 제도적 장치이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확보해 다양한 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다.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역 창업 지원과 이주·정주시책을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형의 ‘고향세’ 제도 활용을 촉진한다. 2016년에 창설된 ‘지방 창생 응원 세제’(기업판 고향세)의 경우, 기업이 창업한 곳이나 공장·지점 등의 거점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함으로써 관광 진흥, 이주·정주, 인재 육성·확보 등의 사업을 촉진하는 우수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제도의 개요와 사례를 소개하는 동영상과 우수사례집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지방거점 강화 세제’에 대해서는 2018년의 세제 개정을 통해 소규모 오피스의 이전 및 확충 등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이전형 사업의 대상지역을 추가 했으므로 이용 촉진을 위해 제도의 홍보를 강화한다.

펴낸곳 국토연구원
기 획 제5차국토종합계획 연구단
번 역 김재호
감 수 이동우
편 집 유지은(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발 행 2019년 7월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전 화 044-960-0114
팩 스 044-960-4760
가 격 비매품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국토연구원)
<http://www.cntp.kr>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출판등록 제2017-9호
ISBN 979-11-5898-449-6

- 国土形成計画(全国計画)
(平成27年8月14日閣議決定、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総合計画課)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
(헤이세이 27년 8월 14일 각의 결정, 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 종합계획과)
 - 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2017改訂版)
(平成29年12月22日 閣議決定、内閣官房 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종합전략(2017 개정판)
(헤이세이 29년 12월 22일 각의 결정,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
 - まち・ひと・しごと創生基本方針2018
(平成30年6月15日 閣議決定、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
마을·사람·일자리창생 기본방침 2018
(헤이세이 30년 6월 15일 각의 결정,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
- 이 책은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위 3개의 문서를 번역하여 작성되었음.

※ 이 책의 내용은 번역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련 없습니다.